수조원 재원 확보·민자 유치 최대 관건

■ 영산강 프로젝트 첫삽 의미와 과제

뱃길복원·주변 관광개발 새 성장동력 추진

영산강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주목

29일 나주시 영산대교 인근 고수부지에서 열린 '나주지구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한승수 총리(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9일 나주에서 열린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영산강 살리기'에 들어갔으며, 전남도는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데다 대운하 논란, 민자유치를 비롯한 재원조달 방안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영산강 살리기 첫삽, 의미=영산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영산강 살리기)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2011년까지 영산대교 주변 6.7㎞ 구간에 383억원을 투입해 생태하천 6.7㎞, 제방보강 3.2㎞, 자전거도로 6.7㎞ 등을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2011년까지 영산강 살리기에 총사업비 1조6천억원을 투입해 하천연장 138㎞, 하도정비 1천590㎥, 환경정비 120.3㎞를 추진하게 된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영산강은 갈수기만 되면 되풀이되는 농업용수 부족난을 해결하고,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영산강 프로젝트 추진 일정=정부의 영산강 살리기와 별도로 전남도가 친환경 뱃길을 복원하려는 사업이 영산강 프로젝트다. 영산강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하도준설을 비롯, 총 34개 사업에 8조5천5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국비예산 1천811억원을 확보했다. 이날 기공식을 한 생태계하천 조성공사 사업비 624억원은 전남도 확보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다. 영산강 프로젝트는 뱃길을 되살리는 사업과 수질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5년까지 영산강 하구둑~광주광신대교(83.59㎞)에 이르는 구간을 폭 60~70m, 수심 6m 정도로 준설해 뱃길을 복원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와 함께 수질개선사업과 영산강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과 과제=정부의 영산강 살리기는 정비사업과 수질개선, 관광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남도는 여기에 더해 친환경 뱃길복원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가 대운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뱃길복원이나 물류 부문은 배제한 채 홍수·가뭄 피해 대책, 하천 주변환경복원, 경제·관광·문화발전 프로젝트에 치중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황포돛배가 다닐만한 수준의 하도준설 및 배수갑문, 통선문 확장 등을 통해 영산강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5월 확정·발표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전남도의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조원대에 달하는 재원확보와 민자유치 방안도 관건이며,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되는 영산강 살리기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지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변공원 조성 등 지역 개발" 기대

"대운하와 다를 바 없다" 우려도

■ 영산강 첫삽 지역민 반응

'영산강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뜬 29일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가져 올 경제적·환경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호남의 젖줄'이라는 그럴듯한 애칭과 달리 영산강은 하구언 준설과 유량 부족 등으로 강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환경오염과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왔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영산강이 정비되는 데 대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환경오염과 자연재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낙동강과 함께 영산강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둑 보강, 수변공원 조성, 생태습지 보전 등 각종 변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영산강이 옛 명성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나주 출신의 김화열씨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논란이 됐던 한반도 대운하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강 정비로 수질도 좋아지고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 영산포 인근 신현철씨도 "예전에는 바닷물이 영산포까지 올라와 배가 들락거리고 시장이 형성돼 활기를 띠었다"며 "뱃길이 만들어지고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계획대로 지역의 새 청사진을 그리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더욱이 환경단체들은 "대운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착공식이 열린 이날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 등 광주·전남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은 29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강 하천정비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회견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4대 강 정비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씌워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진행해 왔음을 드러내고 오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나주지구 영산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관광·문화 명소로 재탄생할 영산강 일대 조감도.

■ 영산강 프로젝트 1단계 사업

(단위:억원)

	사업계획		'09사업 예산액
	사업명	규모	
	총계		2,435
1단계 (2009~2010)	하도준설 (제방보강 등)	L=22㎞ 몽탄~영산포	909 (국토부 나주·함평 생태하천 조성공사 예산 624억 포함)
	천변저류지	4개소, 1,500만㎡	
	영산강변도로	132㎞	60
	2급수이상 깨끗한 영산강 조성	하수종말 처리시설등	1,428
	배수갑문·통선문 확장	240→480m 6→ 60m	
	고대문화권 특정지역개발	문화재 및 관광 휴양시설	38
	하구둑 대체 교량 건설	L=3㎞	
	보성~임성간 철도노선 변경	L=20㎞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 확장	15→140m	

회고 2008

③ 갈피 못잡은 지역현안

亞문화전당 '별관 철거' 싸고 갈등

J 프로젝트 1년 넘도록 승인 안나 난항

호남고속철 조기 개통 우선순위서 밀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추진한 굵직한 현안사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했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 전남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와 F1자동차경주대회 역시 정부 부처 및 지역민과의 갈등, 경기침체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난항 '문화전당 건립' 'J프로젝트'='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기반시설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이 지난 6월10일 첫삽을 떴으나 옛 도청 별관 문제로 전당 건립 공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옛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공대위의 별관철거 반대 농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으나, 시민 사회단체, 각계의 노력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더구나 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공대위가 철거-보존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사태의 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과 해남 일대 87.92㎢(2천660만 평)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체 6개 지구 가운데 3곳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속을 썩이고 있다.

처음에는 환경부가 사전환경성 검토로 6개월을 끌더니 나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초송지구에 포함된 농촌공사 소유의 간척지를 관광단지 사업부지로 내줄 수 없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이의 제기로 J 프로젝트 개발계획 승인 건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갔다. 또 J프로젝트 대상지구인 송천지구가 농림부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전체 사업면적 축소마저 우려되고 있다.

◇제동 걸린 'F1경주대회'=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꼽히는 F1대회는 지난 7월 출자회사 7곳의 납입자본금 600억 원을 확보했으며 경주장 건설을 위한 연약지반 다지기 작업도 지난 10월 마무리되는 등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사업비 3천4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결국, 자본금을 280억 원이나 깎아먹으며 계속되던 경주장 공사가 이달 초 열흘간이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F1대회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갈팡질팡 '호남고속철'=무안공항 활성화와 이를 통한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야 한다는 전남도의 요구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기존의 송정리~목포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 개통을 3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홍행기·윤영기 기자 redplane@